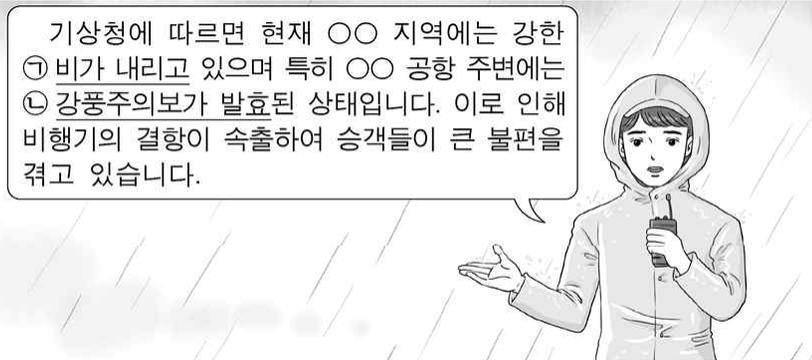


2018년 교육행정직 사회 문제와 해설(A책형) (2018.05.19)

사회문화 1~6번(6문제)
경제 7~12번(6문제)
법과정치 13~20번(8문제)

1. 밑줄 친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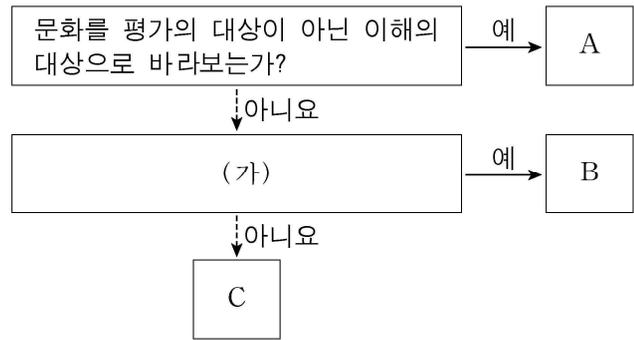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은 자연 현상, ㉡은 사회 현상입니다.
- ① (X)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어 있는 현상은 사회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과는 무관하게 자연 법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 ② (O) 보편성만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모두 나타나는 특성을 지닙니다.
 - ③ (X)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 사회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릅니다. '존재 법칙'은 자연 현상이 인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당위 법칙'은 사회 현상이 '마땅히 ~ 해야 한다'와 같은 인간의 규범적 요구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 ④ (X)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에 예외가 없어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만(확실성의 법칙), 사회 현상(㉡)은 인과관계에 예외가 존재하여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확률의 법칙).

2. 그림은 문화를 대하는 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중 하나이다.)



- ① A는 B, C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②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는 '자기 문화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가?'가 적절하다.
- ③ (가)가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가?'라면 C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 ④ (가)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가?'라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이해의 관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A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며, B와 C는 (가)의 질문에 따라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문화 사대주의로 나타날 것입니다.
- ① (X) 문화 상대주의(A)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며,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상대주의(B, C)는 문화 간 우열이 있다고 봅니다.
 - ② (X) 자기 문화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가)에서 '자기 문화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가?'라고 한다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것입니다.
 - ③ (X)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가)에서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가?'라고 한다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것입니다.
 - ④ (O)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가)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가?'라고 한다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것입니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는 생물학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개인은 죽고 구성원은 계속 달라지지만, 사회는 오랫동안 존속한다. 또한 사회는 강제성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규범을 개인에게 강요한다.

- ① 사회는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②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 ③ 사회는 개인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다.
- ④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주어진 지문에서 사회가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회 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X) 사회를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사회 명목론의 바탕이 되는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 ② (X) 사회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 ③ (O)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들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④ (X) 사회적 문제나 구조적 문제의 모든 원인을 개인에서 찾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사회 명목론은 구조나 제도 개혁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우발적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람이 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사회는 그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본다. 그는 그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자신을 일탈자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①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후속 일탈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② 일탈 행동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나타난다.
- ③ 일탈 행동은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 ④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동 - 낙인 이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주어진 지문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① (O)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후속 일탈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문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차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일탈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② (X)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합니다.
- ③ (X) 일탈 행동은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합니다.
- ④ (X)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5. (가)와 (나)는 각각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① (가)는 상호 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② (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나)는 (가)보다 수혜자의 범위가 넓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합니다.

- ① (O) 상호 부조(相互扶助)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보험(가)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돈을 모아 재해, 질병, 고령,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 부조(나)는 생활 무능력자에 대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② (X) 사회 보험(가)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공 부조(나)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혜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③ (X) 사회 보험(가)과 공공 부조(나)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④ (X) 사회 보험(가)은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국민 전체가 수혜자이지만, 공공 부조(나)는 수혜자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공 부조(나)는 사회 보험(가)보다 수혜자의 범위가 좁습니다.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희는 ㉠ 가족 모두가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 아버지의 성실함을 물려받은 영희는 ㉢ 학교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며 노력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 ① ㉠은 2차 집단이다.
- ② ㉡은 성취 지위이다.
- ③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④ ㉣은 비공식 조직이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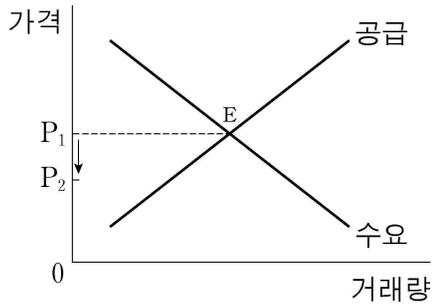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화, 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1차 집단은 직접적 접촉이 나타나 친밀하고 인격적인 인간 관계가 형성되는 집단을 말하고,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이 나타나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가족(㉠)은 1차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O) 귀속 지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속되어지는 지위를 말하고, 성취 지위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지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성취 지위에 해당합니다.
- ③ (X)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부수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는 애초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합니다.
- ④ (X)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한 조직을 말합니다. 시청(㉣)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이 아니므로, 비공식 조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시청(㉣)은 집단의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고, 엄격한 규범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 집단이므로,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다.

7. 그림은 X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X재의 가격을 균형 가격인 P_1 보다 낮은 P_2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은 가격 하한제이다.
- ② X재 생산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 ③ X재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 ④ X재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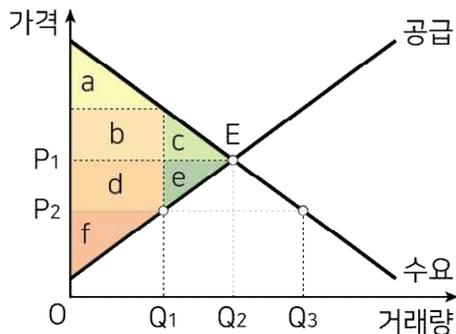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II.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고 가격제의 이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문제에서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은 P_2 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가격 상한제(최고 가격제)에 해당합니다.
- ② (X) 가격 상한제(최고 가격제)는 규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와 반대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가격 하한제(최저 가격제)입니다.
- ③ (X) 아래 그림에서 P_2 를 규제 가격으로 하는 가격 상한제(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공급량은 Q_1 , 수요량은 Q_3 이므로 $Q_3 - Q_1$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③번 해설의 그림에서 가격 규제 이전의 사회적 잉여는 $a+b+c+d+e+f$, 가격 규제 이후의 사회적 잉여는 $a+b+d+f$ 로 나타납니다. 이는 가격 규제로 인해 사회적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다는 것이며, 가격 규제에 따라 X재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과 (㉡)의 차이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이때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을 고려하면 안 된다.

- | | | | |
|---|-------|-------|--------|
| | ㉠ | ㉡ | ㉢ |
| ① | 평균 수입 | 평균 비용 | 암묵적 비용 |
| ② | 평균 수입 | 평균 비용 | 경제적 비용 |
| ③ | 총수입 | 총비용 | 매물비용 |
| ④ | 총수입 | 총비용 | 기회비용 |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출제영역] 합리적 선택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을 말하므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를 최대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때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매물비용(㉢)을 고려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매물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9. 표는 X재 1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X재 1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소비자들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하고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은 7,00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자와 생산자는 X재를 각각 1개씩만 소비하고 생산하며, 조세의 행정 비용은 없다.)

래에 참여할 것이므로, 균형 거래량은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X재 1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므로, 이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2,000×2)입니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생산자	최소 요구 금액
갑	10,000원	가	6,000원
을	9,000원	나	7,000원
병	8,000원	다	8,000원

- ① 소비세 부과 전 X재의 거래량은 3개이다.
- ② 소비세 부과 전 총생산자 잉여는 3,000원이다.
- ③ 소비세 부과에 따른 총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1,000원이다.
- ④ 소비세 부과로 얻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II.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과 사회적 잉여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만약 X재의 시장 가격이 8,000원이라면 소비자 갑, 을, 병은 이를 모두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생산자 가, 나, 다는 이를 모두 공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세 부과 전 X재의 균형 가격은 8,000원, 균형 거래량은 3개가 됩니다.
- ② (O)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뺀 값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자	실제로 받은 금액	최소 요구 금액	생산자 잉여
가	8,000원	6,000원	2,000원
나	8,000원	7,000원	1,000원
다	8,000원	8,000원	0원
총생산자 잉여			3,000원

따라서 소비세 부과 전 총생산자 잉여는 3,000원입니다.

- ③ (X)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값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실제로 지불한 금액	소비자 잉여
갑	10,000원	8,000원	2,000원
을	9,000원	8,000원	1,000원
병	8,000원	8,000원	0원
총소비자 잉여			3,000원

한편 소비세 부과 후 소비자들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했다고 하였으므로, 소비세 부과 후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실제로 지불한 금액	소비자 잉여
갑	10,000원	9,000원	1,000원
을	9,000원	9,000원	0원
병	8,000원	소비하지 않음	0원
총소비자 잉여			1,000원

따라서 소비세 부과에 따른 총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2,000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 갑, 을과 생산자 가, 나가 거

10. 갑과 을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갑과 을의 의견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갑 : 무역 흑자의 누적과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을 : 물가의 상승은 국제 유가의 급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① 갑은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② 갑은 재할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③ 을은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④ 을은 국채 매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V.국민 경제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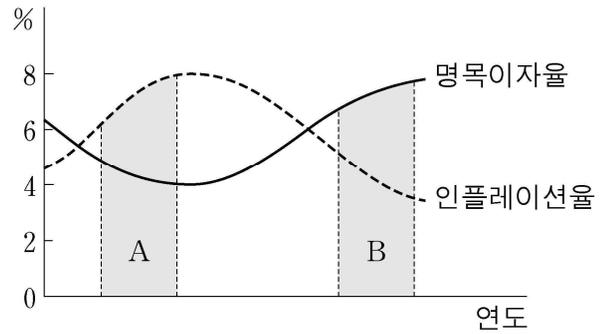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갑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정책을, 을은 경기 확장을 위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 (X)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확장 재정 정책이므로, 갑이 이를 지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 ② (O) 재할인율 인상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이므로, 갑은 이를 지지할 것입니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합니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합니다.
- ③ (X) 법인세율 인상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이므로, 을이 이를 지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됩니다.
- ④ (X) 국채 매각 정책은 긴축 통화 정책이므로, 을이 이를 지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여 이자율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합니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됩니다.

11. 그림에서 A 구간에 비해 B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① 실질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다.
- ② 주택 담보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③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 ④ 가계의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VI.경제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율(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text{실질 이자율} = \text{명목 이자율} - \text{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율)}$$

A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높으므로 실질 이자율이 음(-), B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실질 이자율이 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 ① (X) 위 설명에 의하면 A 구간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음(-), B 구간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양(+)으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B 구간에서 실질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해야 옳은 설명이 됩니다.
- ② (X) B 구간에서 실질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택 담보 대출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 ③ (X)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②번 해설과 같은 맥락에서 B 구간에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금 대출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도 감소할 것입니다.
- ④ (O) 실질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예금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계의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즉, 가계는 현금을 보유하는 대신 예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12. 표는 A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 대비 2014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며,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연도	명목 GDP(조 원)	GDP 디플레이터
2012	1,260	105
2014	1,650	110

- ① 10% ② 15% ③ 20% ④ 25%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V.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이를 변형하여 실질 GDP를 구하는 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ext{실질 GDP} = \frac{\text{명목 GDP}}{\text{GDP 디플레이터}} \times 100$$

이에 따르면 2012년과 2014년의 실질 GDP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실질 GDP (조 원)	$1,200 \left(= \frac{1,260}{105} \times 100 \right)$
2014년 실질 GDP (조 원)	$1,500 \left(= \frac{1,650}{110} \times 100 \right)$

따라서 실질 GDP 증가율은 $25\% \left(= \frac{1,500 - 1,200}{1,200} \times 100 \right)$ 입니다.

13. 국제 사회 행위 주체 (가)~(다)의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기구 |
| (나) 국제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
| (다) 주권을 갖는 독립적 행위 주체로서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단위 |

- | | (가) | (나) | (다) |
|---|-----------|-----------|-------|
| ① | 국제 엠네스티 | 그린피스 | 국제 연합 |
| ② | 국경 없는 의사회 | 세계 무역 기구 | 국제 연합 |
| ③ | 그린피스 | 국제 연합 | 프랑스 |
| ④ | 세계 무역 기구 | 국경 없는 의사회 | 캐나다 |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VI.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는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초국가적 행위체에는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기구,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가)는 비정부 간 기구, (나)는 정부 간 기구, (다)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 ① (X) 국제 엠네스티(=국제 사면 위원회(AI))는 비정부 간 기구(가), 그린피스는 비정부 간 기구(가),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기구(나)에 해당합니다.
- ② (X)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비정부 간 기구(가), 세계 무역 기구(WTO)는 정부 간 기구(나),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기구(나)에 해당합니다.
- ③ (O) 그린피스는 비정부 간 기구(가),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기구(나), 프랑스는 국가(다)에 해당합니다.
- ④ (X) 세계 무역 기구(WTO)는 정부 간 기구(나),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비정부 간 기구(가), 캐나다는 국가(다)에 해당합니다.

14.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행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의회 해산권도 갖고 있다. 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 을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명목적인 국가원수로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 내 최대 다수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각각 갖고 있다.

- ① 갑국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 ②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 ③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가깝다.
- ④ 을국의 의회가 갑국의 의회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강하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문제에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전형적인 정부형태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한정하지 말고,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어떠한 성격의 정부형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① (X) 갑국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행정부(내각)를 불신임하여 총사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 ② (X) 갑국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은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하지만, 행정부가 의회에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점,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점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즉,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③ (X) 을국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국가원수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 내 다수 세력이 내각을 구성한다는 점,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④ (O) 갑국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을국에서는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국의 의회가 갑국의 의회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15. 갑국의 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 의회의 정원은 100명이다. 이 중 50명은 인구와 산업 등의 기준으로 획정한 50개의 지역구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즉 갑국 유권자는 1인당 2표를 행사하는데, 1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나머지 1표는 전국 단위 선거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구 평균 면적은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작지만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약 3배 많다.

- ① 지역구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있다.
- ②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③ 지역구 선거보다 전국 단위 정당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방식이 군소정당에 불리하다.
- ④ 전국 단위 정당투표 선출 의원 수를 늘린다면 의석 획득 정당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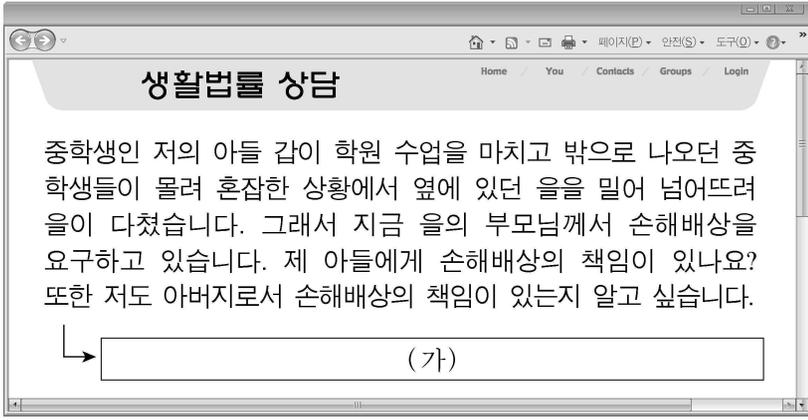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제, 대표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표의 등가성'이란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시문에서 갑국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약 3배 많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 선거구의 인구가 약 3만 명이라면,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인구는 약 1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도시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3만분의 1, 농어촌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1만분의 1이 되어 농어촌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도시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의 3배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 ② (O) 갑국의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갑국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50명의 선거구에서 50명의 의원을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X)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의 경우 군소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하여 당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게 되므로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국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 단위 정당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방식이 군소정당에 유리합니다.
- ④ (X) 비례대표제의 경우 군소 정당에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배분하는 전국 단위 정당투표 선출 의원 수를 늘린다면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수가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그림의 (가)에 들어갈 적절한 법적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ㄴ. 갑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갑은 물론 아버님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ㄷ. 갑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ㄹ.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아버님께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IV.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불법 행위의 이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ㄱ. (X) 민법에서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구체적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만12세 전후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갑은 일반적으로 만13세~만15세 정도일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ㄴ. (O)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가해자의 책임 능력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가해행위를 한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접 가해자인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 가해자인 갑에게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의 감독자에게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ㄷ. (O)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기에 갑에게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책임능력을 제외한 다른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갑의 아버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하나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ㄹ. (X)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과 관련하여 형법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버님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ㄴ' 해설 참조).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한시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자기 지배 원리를 구현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 일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 체제로 볼 수 있다.

- ① ㉠은 평등 선거를 의미한다.
- ② ㉡은 공무담임권에 해당한다.
- ③ ㉢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 ④ ㉣은 대의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의 자기 지배를 의미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I.민주 정치와 법, II.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III.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정치 참여와 선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① (X) 일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중 「보통 선거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과 '평등 선거의 원칙'은 모두 일반적인 '평등 원칙'의 선거법상의 실현원리이지만, 보통 선거의 원칙이 선거권의 귀속(유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평등 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가치(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② (O) '공무담임권'이란 선거나 시험을 통하여 국민이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③ (O)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구성된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는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④ (O) 대의 민주 정치란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를 말합니다. 대의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피지배자(=지배를 당하는 자)에 의한 통치란 이와 같이 대의 민주 정치에서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을 통해 통치를 하는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8.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집회 및 시위를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써 (가) 원칙을 위반하여 (나) 을/를 침해한다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다) 을/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을은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못하였다. 을은 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라) 을/를 청구하였다.

<보 기>

- ㄱ. (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 ㄴ. (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를 전제로 하는 수단적, 능동적 기본권의 유형에 속한다.
- ㄷ. (다)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ㄹ. (라)의 청구는 (다)의 신청이 기각된 것을 전제로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I.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권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ㄱ. (O) 「(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뜻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부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해당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ㄴ. (X) (나)는 「집회의 자유」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아야 보장되고 실현되는 성격을 갖는 권리로서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며, 수단적·능동적 권리는 아닙니다. 수단적 권리로는 청구권적 기본권, 능동적 권리로는 참정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ㄷ. (O) 위헌 법률 심판의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에 「(다)를 신청」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ㄹ. (X) 을은 자신의 선거권이 공권력의 행사(=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라)를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라)는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재판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19.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회사원 갑은 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도주하고 있는 을(17세)을 추격하여 붙잡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병에게 인계하였다. 병은 을을 폭행죄로 조사하고 있다.
- 정(30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공소 제기되었으며 제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

- ① 갑이 을을 붙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을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병은 을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할 수 있다.
- ④ 정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V.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 사유, 형사 절차,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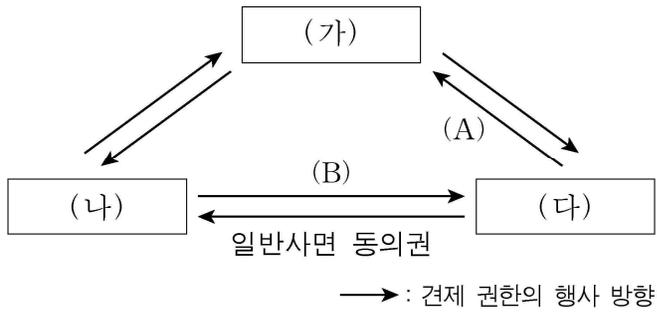
① (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따라서 회사원 갑이 시민을 폭행한 뒤 도주하고 있는 을을 추격하여 체포한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을'을 체포한 회사원 갑의 행위는 폭행을 막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니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② (O)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현행범으로서 체포된 을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X) 을은 폭행행위를 한 17세로서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인 병은 범죄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한 후에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경찰인 병이 직접 범죄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범죄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④ (X)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 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됩니다. 정은 이미 공소 제기되어 제1심 판결까지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즉, 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므로,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 그림은 (가)~(다)의 권한 및 상호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국회, 대통령, 법원 중의 하나이다.)



<보 기>

- ㄱ. (가)는 (나)의 제소로 위한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 ㄴ. (나)는 (다)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ㄷ. 탄핵 소추권은 (A)에 들어갈 수 있다.
- ㄹ.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B)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I.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하는 사면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일반사면 동의권'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 (다)는 '국회'에 해당하며, 나머지 (가)는 '법원'에 해당합니다.

ㄱ. (X)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ㄴ. (O) 대통령(나)은 국회(다)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합니다.

ㄷ. (O)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을 말합니다. 탄핵심판의 대상에는 법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다)가 법원(가)을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ㄹ. (X)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다)가 대통령(나)을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나)이 국회(다)를 견제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B)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